

나주 SRF발전소 갈등 '4가지 해결안' 제시

(고형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장단점·경제성 토론 다음달 13일 회의서 주민수용성 조사 방법 등 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23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 회의 때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주민수용성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전남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서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난방공사가 비용 등을 산출한 4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당사자인 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행정기관인 산업부-전남도-나주시, 사회단체, 검증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1안은 난방공사 입장인 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 SRF 사용), 2안은 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 전량 + 광주 일부), 3안은 SRF 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권 전량), 4안은 범대위 입장인 SRF 발전

소를 폐쇄하고 LNG 100% 가동 등이다. 참석자들은 4가지 방안별 장·단점과 비용 증감 등 경제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LNG만 사용할 경우 적자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철수할 경우 매몰비용 조달 방안과 철수 조건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난방공사와 범대위는 각각의 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음 3차 회의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 및 건물 등에 온

수를 공급하기 위해 2017년 9월 준공됐다. 전남의 3개 권역인 목포·신안권, 순천·구례권, 나주·화순권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해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하는데 시험가동 중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 등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반입에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현재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고위험군 맞춤형 의료급여 관리 52억 절감

광주시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5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6만4768명 가운데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과다 이용 고위험군 수급자 1264명을 선정해 전문 의료급여 관리자 18명이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적정 진료료를 받도록 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돌며 치료 등을 과다하게 받는 '의료 과소비'를 막음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가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결과, 전년보다 진료비는 52억원이 절감됐으며, 급여일수는 연간 11만5000일을 감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7년 172억5900만원에 달했던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용액은 지난해 120억700만원으로 급감했다. 고위험군 수급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비용이 4114만원 감소한 것이다. 시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형태를 분석하고 제도 안내,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교육 등 수급자의 개인별 맞춤형 의료 이용을 도우면서 효율적 의료재정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의 진료료 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시설 개선 약속

이용섭 시장 '현장경청의 날' 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8년 개관 이후 각종 문화센터, 직업훈련 등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종합장애인체육관 내 수영장은 한 달 평균 3130여 명, 연 3만75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문제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체육관 수영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배관 및 공조기 교체, 수영장 타일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현장경청의 날을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용자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원회, 시의회, 북구청, 북구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현장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영장, 화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수영장 안에 화장실이 없어 탈의실을 지나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공강우 실험용 기상항공기 기상청이 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다. 사진은 기상청이 24일 공개한 실험에 쓰일 기상청 기상항공기. /연합뉴스

광주시 도로 위험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2021년까지 구축

250억 들여 간선도로 143km 국토부 시범사업 선정 광주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실증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주요 간선도로(143.83km)에 구축한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고보조 공모사업으로 지난 1월 제안평

가를 통해 광주시와 울산시 등 2개 지자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50억원으로 국토부가 150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시가 나머지 100억원을 부담한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C-ITS는 교통인프라와 차량, ICT가 융합된 차세대 교통시스템으로, 길가에 설치된 인프라와 차량 간(V2I), 차량과 차량 간(V2V) 통신으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도로변에 설치된 내 설치된 단말기로 뒤 따라오는 차량에 신속하게 사고정보를 전달, 연쇄추돌사고를 막는 방식이다. 또 결빙구간, 터널구간, 급커브 구간 등 사고위험 구간에서는 위치정보를 확인해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C-ITS는 도로에 C-ITS 전용통신망(Wave)과 상용통신망(LTE 또는 5G)을 구축해 차량이 교통정보를 주고받게 되며, 이를 위해 차량용 단말기 탑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와 시내버스, 택시 등에 우선 단말기를 구축해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통신호제어 온-라인을 100%(현재 72%)까지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서비스를 지원(스쿨존, 실버존 교통안전 운전 지원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 지원서비스, 대중교통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46억 확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정부 예산 46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3.4배가 더 많은 액수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로의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도로 개선과 회전 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지난해 전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6개소,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개선사업 3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회전교차로사업 11개소를 신규 추진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전남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1.5명으로 전국 평균 8.5명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민선7기 기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반으로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헌권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와 도 자체 예산을 확대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